
 금융위원회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 기획재정부	
	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7.5.(화)		
책 임 자	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유 재 훈 (02-2100-2920)			담 당 자	김 정 주 사무관 (02-2100-2928) 김 보 균 사무관 (02-2100-2921)		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주 환 옥 (044-215-2750)				염 철 민 사무관 (044-215-2754)		

제 목 : 서별관회의 자료(추정)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

-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
 -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움
-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·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으로
 - 이러한 사전협의를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하여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
 -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한 것임
-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
 -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, 해당 기업의 경영 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, 시장·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음

- 특히, WTO·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, 통상문제까지 야기되어
 -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
- * OECD 조선작업반 회의('16.5.23~24일)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공적 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며, '16.6.21일 일본 무라야마 시게루 조선공업회 회장은 “대우조선 지원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고 발언

〈 실사결과 중 특정 시나리오를 택한 이유 〉

- ☐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

〈 산은·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〉

-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, '결정'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
- 다만,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, 정상화 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·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
- 이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에도 근거가 있으므로,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음

- * 감사원법 제34조의3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(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) 금융기관의 여신업무(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.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
2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
3.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·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